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7. 7.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I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 조사관에 대한 테러 공격 규탄... 1
- 베트남,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혁 필요 5
- 스페인, 계속되는 부패 사건으로 집권 여당 곤혹 8
- 나이지리아, 국가정보원 소유 고급 아파트에서 4,300만 달러 발견 · 10
- 중국,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재산 신고 규정 도입 12
- 중국, 반부패 드라마 ‘인민의 이름으로’ TV와 온라인에서 선풍적 인기 ... 13
- 백악관, 전직 로비스트 및 사내 변호사 출신 참모진에게 공직자 윤리규정 면제 권한 부여 15
- 브라질, 미세우 테메르 대통령 부패 혐의 기소 19

II 한국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보건복지부 노바티스 코리아에 과징금 부과와 제품 보험적용 중지 처분 · 23
- 한국의 공익신고 : 한국 재벌문화에 반기를 든 현대맨 28

III 국제회의 동향

- ‘17년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31
- ‘17년 제2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32
- 제15차 AOA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34
- 제8차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장 회의(ACA) 포럼 35
- 제8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37

IV 옴부즈만 소식

- 아일랜드: 옴부즈만 및 어린이 옴부즈만에서 난민거주시설 주민 민원 조사 담당... 38
- 홍콩: 학생 정신건강평가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 조사 40
- 나미비아: 옴부즈만이 이룬 인권의 승리 42
- 시에라리온: 신입 옴부즈만 취임 43
- 스웨덴: 보호자 미동반 아동 인계 및 후속조치에 허점 44
- 캐나다: 시 당국에서 공원 사용 허가 부당 취소 46
- 호주: 연방 옴부즈만 임명 48
- 호주: 퀸즐랜드 옴부즈만, 토지 경매공고에 소유주 이름 명시 비판... 49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 조사관에 대한 테러 공격 규탄 (II, 2017.4.14)

-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의 노벨 바스웨단(Novel Baswedan) 조사관이 4월 11일 화요일 아침 염산 테러로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북자카르타 끌라빠가딩에 위치한 자택 근처 사원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신원 미상의 범인이 노벨 바스웨단 조사관에게 염산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네시아의 전자신분증 사업 비리 의혹 및 2011년 운전 시뮬레이션 기기 조달 사업 관련 부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끌었던 노벨 바스웨단 조사관은 최근 수년 간 수차례의 신변 위협과 공격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화요일 사건 발생 이전에도 2016년 중반 노벨 조사관은 전자신분증 관련 사건 조사 중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부패척결위원회 본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사고의 충격으로 노벨 조사관은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으나 부상은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또한, 노벨 조사관은 2015년 벵골루 주에서 한 전과자를 사망하게 한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 본부의 다당 트리사송코(Dadang Trisasongko)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는 노벨 바스웨단 조사관에게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직원 보호 시스템을 즉시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 각급 직원을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엄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5년에는 아피프 줄리안 미프타(Afif Julian Miftah)라는 또 다른 부패척결위원회 조사관이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았으며 실제 그의 차량에 화학물질이 뿌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미프타 조사관은 무함마드 나자루딘(Muhammad Nazaruddin) 전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자금 세탁 의혹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부패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사건 규모가 클수록 위협의 정도도 커

- 인도네시아의 악명 높은 뇌물수수 관행 척결을 위하여 2002년 창설된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는 직무수행 관련 위협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부패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나섰던 조사관들은 저주 주술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왔다.
-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조사 96건, 수사 99건, 기소 76건, 무혐의 70건, 집행 81건이 진행 중이었으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총 부정부패 관련 사건 수는 조사 848건, 수사 567건, 기소 465건, 무혐의 390건, 집행 414건을 처리하였다.
- 부패척결위원회 조사관에 대한 물리적 공격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위원회 창설 이후 이러한 공격으로 인한 공식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직원에 대하여 외근 시 지급되는 권총 외에는 기타 보호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 위원회의 반부패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는 수사관의 사소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찰의 고발도 있다. 2015년 초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위원장이었던 아브라함 사마드(Abraham Samad)와 반방 위조잔토(Banbang Widjojanto) 부위원장이 사임했다.
- 이미 수많은 살해 위협 및 테러 공격을 당한 노벨 바스웨단 조사관에 대한 이번 염산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에서는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및 다수의 정재계 인사가 연루된 주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에서는 역대 최고의 국고 손실 및 관련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전자신분증 사업 관련 부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력 정치인들이 약 5조 9천억 루피(미화 4억 4천만 달러)에 이르는 공적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외 국가에도 만연한 부정부패

- 인도네시아는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 반부패인식지수에서 176개국 중 90위를 기록하였고 국민의 60%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있어 부정부패가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다. 반부패위원회 고위 임원과 조사관, 직원에 대한 공격은 반부패 노력에 대한 테러와 위협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반부패 운동 자체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인도네시아에서만 그러한 공격과 테러, 위협이 자행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노벨 바스웨단 조사관이 공격을 받은 4월 11일 하루 뒤, 4월 12일에는 두 명의 아프가니스탄 반부패·정의센터 직원이 살해당했다. 이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사회의 부패 척결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 몰디브 본부는 위협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몰디브 내각의 고위 공무원 한 명은 국제투명성기구 몰디브 본부를 폐쇄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2008년,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자 아직도 부정부패가 만연한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명박 전대통령이 한국의 국가청렴위원회를 해체했던 것이다.
-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 본부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척결위원회에 대한 위협 및 테러와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지수 순위 및 점수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다. 지난 10년 간 그러한 위협 및 테러 행위는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낮은 국가에서 주로 발생했다. 최근 2016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53점, 인도네시아 37점, 몰디브 36점, 아프가니스탄 15점을 기록했다. 반부패기구에 대한 위협과 테러를 겪은 국가에는 말레이시아 (49점), 남아공 (45점), 이집트 (34점), 나이지리아 (28점), 케냐 (26점) 등이 있다.
- 해당 국가들의 낮은 부패인식 점수는 정부의 책임 부족 및 낮은 수준의 투명성, 감시·감독, 사회 안정, 국민 보호, 시민사회 역할 상실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반부패 운동이 소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부패척결위원회와 반부패 운동을 지지

- 반부패 활동가들은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 조사관에 대한 최근의 염산 테러 사건이 위원회를 위축시키고 위협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다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4월 11일 목요일 부패척결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반부패위원회와 인도네시아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노력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 부패 척결의 역사를 보면, 부패한 제도와 관련자들이 책임을 빠져나가는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개인의 용기가 큰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알 수 있다. 부패척결위원회에 대한 보호와 안전 보장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자국민의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
- 지난 수년 간 반부패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언론인과 시민운동가, 개혁 인사들의 석방 및 테러, 협박, 구금, 폭력, 정치 보복 척결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과 함께 압력을 행사해 왔다.
- 최근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 조사관에 대한 테러와 협박 사건을 계기로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 본부 및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 ▶ 노벨 바스웨단 조사관에 대한 테러와 협박 행위를 전담하여 최적의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진상조사팀을 구성할 것
 - ▶ 대통령이 부패척결위원회 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보호조치를 제공할 것
 - ▶ 공익신고자 및 반부패 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

※ 원문기사 : TI INDONESIA CONDEMNS THE ATTACK AGAINST THE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KPK) INVESTIGATOR (TI, Apr. 14, 2017)

베트남,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혁 필요 (EAST ASIA FORUM, 2017.4.19)

- 2016년 상반기에 베트남의 부패 척결 노력은 새로운 원동력을 얻었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연임에 성공한 응우옌푸쑹(Nguyen Phu Trong)이 세력을 모아 당원 윤리 강령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결의안과 훈령을 발의한 것이다.
- 그 이후 응우옌푸쑹 서기장은 특히 트린 주안 탄(Trinh Xuan Thanh)과 부 후이 호앙(Vu Huy Hoang)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에게 날을 세웠다. 부도지사 직을 역임했던 트린 주안 탄은 페트로베트남 건설합작회사를 담당할 때 약 3조 베트남동(약 1억 3천 2백만 달러)의 국고 손실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베트남 무역산업부 장관이었던 부 후이 호앙은 산업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트린 주안 탄과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등의 ‘부실경영과 심각한 위법행위’로 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산당 내 보수파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격을 환영하며 ‘국가 내부의 적’과 싸우는 데 더욱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진격의 나팔’ 소리라고 평했다.
- 그러나 2016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노력에 걸림돌이 나타났다. 트린 주안 탄이 공산당에서 제명되고 기소되었으나 비밀리에 출국에 성공한 후 국제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부 후이 호앙 역시 모든 공산당과 정부 내의 모든 직책이 박탈되었으나 기소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당에서 공식 제명 되지 않았다.
- 탄과 호앙이 이처럼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베트남의 경찰 및 사법 제도의 취약성과, 베트남 정계의 내부자 비호 실태,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하여 내부 결속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산당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수년 간 경찰과 사법부가 부정부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부문으로 부상하였다. 응우옌푸쑹은 부패를 척결해야 할 경찰과 사법부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다. 그러나 경찰과 사법부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이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힘든데, 국가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일당정치 체제에서 그러한 문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 부정부패 문제의 원인은 '제도적 결함'이라고 여겨진다.

- 이러한 베트남의 '제도적 결함'은 경제 자유화와 정치적 민주화라는 양자 사이의 개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난 10년간 베트남에서는 고위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정책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소위 '슈퍼리치' 계층이 부상했다.
- '슈퍼리치' 계층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법과 정책을 위반하는 '정책적 부정부패'를 통하여 신흥 부자가 된 개인들과 국영기업 임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영기업 임원들은 부정부패를 의미하는 '부실경영과 심각한 위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막대한 손실의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베트남 거버넌스센터에서 최근 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의 38%가 기업 임원을 3대 부패집단의 하나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슈퍼리치'들이 베트남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베트남의 '제도적 결함'은 정치인들에 대한 비호 때문에 더 해결하기 힘들다. 국영언론에서는 트린 주안 탄의 경찰조사 회피 배후에 누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SNS 상에서는 트린 주안 탄에 대한 의혹이 현 호치민시 공산당 서기장이자 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딘 라 탕(Dinh La Thang)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응웬 쩐 중(Nguyen Tan Dzung) 전 총리와의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 후이 호양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트린 주안 탄과 부 후이 호양의 재임 중 시행되었던 12개의 산업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국고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향후 수 주 내에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검토가 있을 예정이지만 결국 이러한 손실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 베트남 공산당에서 '쥐를 잡기 위해 항아리를 깨' 각오가 없다면, 즉 제도 및 정치개혁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부패 척결이라는 과제 달성은 요원해질 것이다. 2017년 2월 글로벌부패바로미터에서 베트남은 뇌물수수비율 기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나타났다. 베트남 국민의 65%는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53%만이 일반인들의 노력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절반 이상은 공산당의 반부패 노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러한 통계를 보면 베트남 공산당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내부의 적'을 물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국가 곳곳에 깊이 뿌리내린 기득권과 제도 실행에 있어서 정치인 비호가 가장 큰 주안점이 되는 현실에서 베트남의 실질적인 개혁은 쉽지 않아 보인다.

※ 원문기사 : Fighting corruption in Vietnam requires institutional reform (EAST ASIA FORUM, Apr. 19, 2017)

스페인, 계속되는 부패 사건으로 집권 여당 곤혹 (FINANCIAL TIMES, 2017.4.19)

- 자금횡령 의혹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전 스페인 국민당 마드리드 지역위원장 이그나시오 곤잘레스(Ignacio Gonzalez)가 구속되었다.
- 집권 보수당의 유력 의원이 스페인 경찰에 구속된 이후 정치권 부정 부패의 그림자가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정부까지 미치고 있다.
- 스페인 경찰에서는 2015년까지 국민당 마드리드 지역위원장직을 지낸 이그나시오 곤잘레스가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의혹 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수요일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56세의 곤잘레스는 다른 몇몇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국영 상수도회사인 카날 이사벨 II(Canal Isabel II)의 자금 유용 사건에 대한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 국민당과 관련된 일련의 부패 의혹으로부터 정권을 지키느라 지난 수년 간 애를 써 온 라호이 총리가 심각한 법적 타격을 받은 바로 이튿날 곤잘레스가 구속되었다. 마드리드 고등법원에서는 지난 화요일 국민당 부정부패 사건 중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소위 ‘귀르텔 스캔들(Gurtel scandal)’과 관련하여 라호이 총리의 증인 소환을 명령했다.
- 라호이 총리 본인에 대한 혐의는 없으나 총리의 증인소환으로 인하여 공공입찰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국민당 정치인들이 연루된 복잡한 의혹에 대한 총리의 책임과 관련성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것으로 야당 및 반대파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라호이 총리가 직접 증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 응답을 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호이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아직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라호이 총리는 10개월 이상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극복한 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하였고 기대치를 웃도는 경제 성장이라는 성과를 내놓았다.
- 최근 IMF와 스페인 중앙은행에서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스페인은 올해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화요일 발표된 IMF의 최근 예측에 따르면

스페인의 2017년 GDP 성장률이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최근 스페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당 지지율이 여전히 야당에 앞서 있기는 하지만 국민당의 선거 관련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부패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최근 CIS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45%가 부정부패를 스페인의 가장 심각한 3대 문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치이며 1월보다 10%나 상승한 수치이기도 하다.
- 국민당 지도부에서는 지난 수요일 곤잘레스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재빠르게 이전에 당원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는 곤잘레스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 곤잘레스의 후임인 크리스티나 시푸엔테스(Cristina Cifuentes) 현 국민당 마드리드 지역위원장은 국민당 정부에서 사법부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 : Spanish corruption case returns to haunt ruling party (FINANCIAL TIMES, Apr. 19, 2017)

나이지리아, 국가정보원 소유 고급 아파트에서 4,300만달러 발견 (CNN, 2017.4.20)

- 나이지리아 국가정보원 소유의 고급 아파트 기습 수색에서 4,300만 달러의 현금이 발견되면서 국가정보원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 무함마드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대변인 페미 아데시나(Femi Adesina)는 4월 12일의 기습수색 관련하여 아요델 오케 (Ayodele Oke)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라고스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대한 반부패기관의 기습수색에서 4,300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2,320만 나리아 (나이지리아 화폐, 약 76,000 달러 상당) 및 27,800파운드(약 35,000달러)가 발견되었다.
- 경제금융범죄위원회에서는 당시 해당 현금이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그러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요델 오케 국정원장이 해당 자금이 국가정보원 소유이며 비밀 작전을 위하여 따로 보관했었다고 시인했다.
- 아데시나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에서 문제의 자금을 어떻게 확보했으며 누가 이를 승인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예미 오신 바조(Yemi Osinbajo) 나이지리아 부통령이 이끄는 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향후 2주 내에 부하리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 나이지리아는 수십 년 간 부정부패와 자금횡령 문제로 곤란을 겪어 왔다. 경제부 장관이 지난 12월 새로운 공익신고 정책을 발표한 이후 올 한 해 동안 반부패기구에는 여러 건의 비자금 압수 성과를 기록했다.
- 반부패기구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은 초췌한 여인이 문제의 아파트를 드나들면서 가방을 나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라고스의 아파트를 급습했다.



<라고스 고급 아파트에서 발견된 현금 >

- 4월 12일 라고스 아파트 기습수색은 최근 반부패기구에서 실시한 여러 건의 기습작전 중 하나였다.
- 이달 초 나이지리아 반부패기구는 라고스 시장에서 현금 2억 5천만 나리아 (817,000 달러) 및 쇼핑센터에서 현금 4억 4800만 나리아 (150만 달러)를 발견하기도 했다.
- 이러한 비자금 압수는 안전한 창구를 통하여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공익신고 정책 덕분에 가능했다. 횡령된 공적자금이 회수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공익신고자는 회수된 총 금액의 2.5%~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원문기사 : Nigeria's spy chief suspended after \$43 million seized from apartment (CNN, Apr. 20, 2017)

중국,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재산 신고 규정 도입(The Business Times, 2017.4.20)

- 최근 반부패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에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집권 공산당에 신고하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다고 국영 언론이 전했다.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성장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능력에 권력의 근거를 두는 공산당의 존재에 사치와 부패가 큰 위협이 된다고 여기고 있다.
- 계속되는 부정부패 사건 단속이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고위공직자들을 넘어서 말단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부패행위까지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중국의 공직자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
- ‘부구청장 이상 직급의 모든 공직자들은 혼인상태, 해외여행, 전과기록, 임금 및 기타 소득, 가족 재산, 주식, 펀드, 보험, 기타 투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중국 국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중국의 내각인 성의회에서 공동으로 공표한 이번 규칙에 따르면 보고 10건 중 1건 정도의 빈도수로 임의 감사가 가능해진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 신화통신은 또한 ‘공직자의 개인정보 신고는 공산당에 대한 이들의 충성도를 증명하는 중요한 평가기준이며 진급 절차와도 연계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신화통신은 또한 개인정보의 허위신고나 의도적 은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으나 정확히 어떤 처벌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 중국 공무원들은 당의 지침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친지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재산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 중국에는 아직까지 공무원에 대한 재산공개 의무가 없고 독립 반부패 기구 역시 부재하며, 공산당에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무원 청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원문기사: China issues stricter rules for officials to report assets (The Business Times, Apr. 20, 2017)

중국, 반부패 드라마 '인민의 이름으로' TV와 온라인에서 선풍적 인기 (VARIETY, 2017.4.20)



- 대형 방송사가 장편 극영화를 제작·방영해서 큰 인지도를 쌓는 일이 미국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 듯하다.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한 중국 드라마 '인민적명의人民的名义(인민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People)'가 TV와 온라인 모두에서 대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방영 3주 만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네티즌들은 이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친구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보다 더 흥미를 끄는 사실은 '인민적명의'의 주인공이 부패에 맞서는 검사로서 중국인들도 즐겨본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와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 드라마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제작비만큼의 작품의 수준이 높지는 않다고 말한다.
- 작품의 수준이 어찌 되었든 올 가을 열리는 당대회에 앞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과 현재 진행 중인 강력한 반부패 노력에 대한 중국 국민의 인지도가 이 드라마로 인하여 더욱 높아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 총 55부작으로 육의(陸毅, Lu Yi, 루이)와 장풍의(張丰毅, Zhang Fengyi, 장평이) 등 중국 연예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하는 '인민적명의'의 제작을 위해 총 3,190만 달러의 라이선스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라마는 지난 3월 28일 후난위성 TV를 통해 방송되었으며 첫 화부터 폭발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
- '인민적명의'는 방영 전부터 시청자가 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4월 둘째 주에 시청자 수는 이미 3억을 넘어섰다. 중국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iQiyi.com)는 ‘인민적명의’의 조회 수가 6억 6천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동영상 사이트 여우쿠(Youku)에서는 거의 2억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다.

- 2014년 시진핑 주석은 중국 언론사 대표들에게 문화와 예술 부문이 인민과 사회주의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민적명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 산하의 영화·TV센터와 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 진둔 드라마센터의 물류지원부를 통하여 공산당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 ‘인민적명의’의 총 제작비는 1,700만 달러로, 조이힐 미디어컬처(Joyhill Media Culture)와 데센 인터네셔널 미디어(Desen International Media) 등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았다.
- 10년 전에도 중국에서 반부패 드라마가 크게 유행했으나 당국에서는 정치적 민감성과 너무 많은 반부패 드라마 제작을 이유로 2004년 이를 금지시켰다. ‘인민적명의’가 그 이후 처음으로 제작된 반부패 드라마이다.
- 중국 공산당의 설립 과정을 다루었던 ‘해방’(2009년)이나 ‘동쪽’(2011년) 등 이전의 정치선전 드라마와 달리 ‘인민적명의’는 현대물이며 부패 공무원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반부패 수사를 그리는 주매삼(周梅森, Zhou Meisen, 저우메이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이다.
- ‘인민적명의’의 수사관들은 현대적인, 마치 FBI와도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공무원을 급습하는 장면이나 다른 공무원의 자택에 벽처럼 쌓여있는 돈을 보여주는 장면 등은 최근 벌어진 실제 사건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 이로(李路, Li Lu, 리루)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와 부패 사건들의 자세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검열이 예상했던 것보다 엄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 감독은 또한 ‘반부패는 당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과제가 되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다.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호랑이(고위 공무원)’와 ‘파리’(하급공무원) 모두의 부패를 뿌리 뽑는데 아주 열심이어서 심지어는 그쪽의 작전이 허구의 드라마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 원문기사: Chinese Corruption Series ‘In the Name of the People’ Rules on TV and Online (VARIETY, Apr. 27, 2017)

백악관, 전직 로비스트 및 사내 변호사 출신 참모진에게 공직자 윤리규정 면제 권한 부여 (New York Times, 2017.5.31)

- 수요일 공개된 기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16명의 참모에게 백악관 합류 전 로비스트로 일하던 당시 관여했던 정책 사안 관련 업무를 백악관에서 담당하고, 또한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의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 허가를 부여했다.
- 트럼프 정부 초기 4개월 간 부여된 이러한 특별 허가는 전임 오바마 정부에서 부여했던 것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윤리 규정 면제권한’이라고도 알려진 특별 허가의 자세한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직자윤리국 사이의 극심한 갈등 후에 공개되었다. 공직자윤리국에서는 트럼프 정부에게 문제의 특별허가를 비밀리에 부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
- 특별허가를 부여받은 참모 명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라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와 선임고문 켈리언 콘웨이(Kellyanne Conway)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프리버스가 공화당 전국위원회 등의 기관 대표를 맡았었고 백악관 업무의 일환으로 이들 기관 관련자들과 여전히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허가가 필요하다고 백악관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워싱턴 정계에서 로비스트의 영향력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특별허가는 전직 로비스트들에게도 주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까지 워싱턴의 로펌 베나블(Venable L.L.P.)의 파트너였던 경제보좌관 앤드류 올멤(Andrew Olmem)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메트라이프, S&P 글로벌 등 수많은 금융사를 대변하여 미국 정부에 로비를 펼쳤던 인물이다. 올멤 역시 윤리규정 면제 특별허가를 받음으로써 푸에르토리코의 경제 문제 관련하여 이전 고객들과 계속 접촉하고 회의를 통하여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수재해보호법 개정이나 금융안정 감독위원회의 보험회사 관리 개혁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백악관 측에서는 밝혔다.

- 두 번째 특별 면제권은 올 1월까지 석유·가스회사 데본 에너지, 석탄발전 회사 탈렌 에너지 등의 로비스트로 등록되어 있었던 마이클 카탄자로 (Michael Catanzaro)에게 주어졌다. 과거 오바마 정부의 환경 규제에 반대하는 로비를 했던 카탄자로의 역할은 이제 윤리강령 면제권을 부여 받음으로써 해당 규제의 철회를 담당하는 역할로 옮겨졌다.
-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사의 로비스트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및 은퇴정책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샤히라 나이트(Shahira Knight) 역시 특별허가를 부여받았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퇴연금투자 회사 중 하나인 피델리티와 연관된 일을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 준법 관련 문제와 기타 트럼프 선거본부의 법적 문제를 담당했던 로펌 존스데이(Jones Day) 출신의 전직 변호사 다섯 명과 직원 한 명도 특별 윤리 면제권한을 부여받아서 존스데이와 계속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백악관 자문 도널드 에프 맥간 2세(Donald F. McGahn II) 역시 존스데이 변호사 출신으로 특별 면제권을 부여받았다.
- 수요일 공개된 문제의 윤리강령 면제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전직 브레이트바트 뉴스 대표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자문인 스티븐 케이 바논 (Stephen K. Bannon)의 명백한 윤리 문제가 소급되어 무효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윤리정책에 의하여 바논은 브레이트바트 뉴스 재직 당시 담당했던 주제들과 관련하여 2년간 브레이트바트 뉴스 임직원과 접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워싱턴의 진보시민단체 ‘책임과 윤리 정치를 위한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따르면 바논은 브레이트바트의 편집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했다고 한다.
- 1월 20일까지 소급 적용되는 윤리강령 특별면제권을 부여받은 백악관 보좌관들은 전 직장 혹은 전 고객과 관련된 경우에도 다양한 정책적 주제와 관련하여 언론사와의 접촉 및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백악관의 선임 보좌관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특별 면제 권한을 통하여 이들은 전에 일하던 곳이나 함께 일했던 상사 등 다양한 정치 단체와 접촉할 수 있다.
- 백악관 린지 이 월터스(Lindsay E. Walters)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가

가능한 경우 참모진들에게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별허가를 부여하는 대신 민간부문에 몸담았을 때 담당했던 분야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맡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 대변인은 또한 '투명한 국정 운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윤리강령 면제특권을 부여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수요일 공개된 문건에는 백악관 참모진만 언급되어 있을 뿐, 연방 기관 공직자의 경우는 나타나 있지 않다. 연방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부문에서 일할 당시의 고객이나 사업 파트너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새로 임명된 공직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윤리규정 면제 특권에 대한 상세 내용은 며칠 안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 이러한 면제 특권의 원래 목적은 특수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고용을 통하여 정부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카탄자로와 나이트 모두 과거 공공부문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카탄자로는 상원 환경정책 감독 위원회 보좌관이었으며 나이트는 하원 세입위원회 조세 정책 분야에서 일한 바 있다.
- 오바마 행정부에서 로비스트 고용 금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윤리 규정을 도입하였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정부에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윤리 규정 면제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윤리규정 면제 특권 부여 건수는 오바마 재임 기간 중에 증가했다.
- 사상 최초로 공직자 임용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 규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여한 공직자 윤리규정 면제 특권의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오바마 재임 8년 동안 백악관 참모진에 대하여 약 16건의 면제 특권이 부여되었고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하여 총 70건의 면제특권이 주어졌다. 그 중 오바마 취임 4개월 내에 백악관 참모진에 대하여 주어진 면제 특권의 수는 세 건에 불과했다.
- 대부분의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윤리강령 면제 특권을 부여받았던 공직자들은 자신의 이전 민간부문에서 했던 일과 공직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사소하거나 윤리강령 면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했다고 말했다.

- 예를 들어, 오바마 취임 첫 달에 윤리규정 면제 특권을 부여받은 세 명 중에는 대통령의 선임 고문이었던 발레리 자렛(Valerie Jarrett)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 명 모두 비영리단체에서 일한 바 있지만 백악관에 합류하면서 관련 정책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
- 미셸 오바마 영부인실 정책 및 사업 담당이었던 조슬린 프라이(Jocelyn Frye)도 윤리규정 면제 특권을 부여받았다. 백악관 합류 이전 여성가족 파트너십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고문 역할을 했던 프라이는 영부인실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담당했다.
- 트럼프는 지난 1월 자신의 행정부에 임용될 공직자들을 위한 윤리 규정에 대한 대통령령을 공포했는데, 오바마 정부의 윤리 규정의 많은 부분을 글자 그대로 차용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정부 합류를 위하여 로비스트직을 방금 사임한 자들에 대한 정부부문 고용을 광범위하게 금지했던 규정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 공직자 윤리규정 면제 특권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리 목적 활동을 했던 전직 산업계 로비스트에 대하여 일부 공직에서도 같은 분야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진보 비영리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의 대표였던 로버트 바이스만(Robert Weissman)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자 윤리 규정이 그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직자 윤리규정은 업계 관계자들이 공공부문에 개입하여 이전 고객의 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 바이스만은 ‘트럼프 정부는 자신의 가장 대표적인 윤리적 성과라고 자랑했던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에 쌓인 미국 정치의 쓰레기를 치우겠다던 트럼프가 자신이 공포한 대통령령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 원문기사 : White House Details Ethics Waivers for Ex-Lobbyists and Corporate Lawyers (New York Times, May 31, 2017)

브라질, 미세우 테메르 대통령 부패 혐의 기소 (New York Times, 2017.6.26)

- 지난 월요일, 브라질 검찰총장이 미세우 테메르(Michel Temer) 대통령을 부패 혐의로 기소하였다. 전달책을 통하여 152,000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호드리구 자노(Rodrigo Janot) 검찰총장은 이를 ‘브라질 연방 공화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데 일조했다’고 평했다.
- 기소 며칠 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30년 간 브라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7%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안 그래도 위태로운 정치경력에 더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브라질리아 사저에서 가족경영으로 식품대기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사업가 조슬리 바티스타(Joesley Batista)와 밤늦게 만나 부패 수사 방해를 허락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비밀리에 녹음되어 공개되면서 테메르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 자노 검찰총장에 따르면 ‘테메르 대통령은 바티스타 회사 소유의 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바티스타에게서 152,000달러를 받기로 했으며, 테메르는 도덕적 손해배상으로 3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테메르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로드리고 로차 로르스(Rodrigo Rocha Loures)에게 주기로 약속된 1,100만 달러의 뇌물도 테메르 대통령의 혐의에 추가되었다. 로르스가 문제의 뇌물을 담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수트케이스를 전달받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로르스는 구속되었다.
- 이제 테메르 대통령의 운명은 브라질 하원의 손에 달려 있다. 하원의원인 브라질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테메르 대통령의 부패 혐의, 혹은 추후에 밝혀질 수도 있는 다른 혐의를 인정하고 대법원에서 이를 제청하는 경우 테메르 대통령은 최대 180일의 직무정지에 처해지고 재판이 열릴 수 있다.
- 분석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구원해 주기에 충분한 수준의 지지를 대의원 내에 확보해 놓은 상태로 보인다.
- 내년 선거를 앞두고 브라질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자신이 연루된 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테메르 정부라도 그 편에 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페르남부코 연방 대학 정치학과의 마르쿠스 멜로(Marcus Melo) 교수는 말한다.

- ‘테메르 대통령이 레임덕 상태이기는 하지만 놀랍게도 아직 많은 정치인들이 그의 편인데, 이들 역시 많은 부분 테메르 대통령의 부패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멜로 교수는 덧붙였다.
- 그러나 상파울로 게틀리오 바르가스 재단의 헌법 교수 로베르토 디아스(Roberto Dias)는 검찰총장이 테메르 대통령에 대해 별도 혐의들을 적용하여 각기 별도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 ‘기소가 한 건 추가될 때마다 테메르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디아스 교수가 덧붙였다.
- 기소 한 건 한 건은 브라질의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하다고 테메르가 주장하는 긴축정책의 야심찬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금융시장에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한 브라질의 금융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긴축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 부패 혐의가 공개되기 전 지난 월요일, 테메르 대통령 역시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테메르는 ‘2안은 없다. 계속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아무것도 우리 정부를 망칠 수 없을 것이다. 나도 그렇고 내각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테메르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단호히 부정하였고 바티스타가 검찰 측과 협력한 대가로 형량을 줄이는 거래를 제안 받았다고 자주 지적하기도 했다.
- 테메르는 혐의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제기되는 혐의들로 테메르 정부는 광범위한 개혁안은 고사하고 일상적인 운영조차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월요일, 연방 경찰에서는 테메르 대통령이 바티스타로 하여금 다른 부패 사건으로 징역형에 처해진 하원 대변인 에두아르도 쿤차(Eduardo

Cuncha)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주게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메르 대통령에게 별도의 새로운 혐의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 바티스타의 회사 JBS의 임원들은 테메르가 자신의 브라질민주운동당을 위하여 수십만 달러의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테메르는 2010년 당에 대한 4,000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 테메르는 모든 의혹을 빠져나갔다.
- 이 달,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전 브라질 대통령이 2014년 대선 중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선거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자노 검찰총장이 제기한 혐의에 대한 하원의 승인 투표가 취소되거나 투표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게 하려면 172명의 의원이 테메르 편에 서야 한다.
- 독립 모니터링 사이트 ‘콩그레스 인 포커스’의 설립자인 실비오 코스타(Sylvio Costa)는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다른 혐의가 추가적으로 폭로되거나 최근에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다시 악화될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 코스타는 또한 1년 전 하원의원 512명 중 약 400명이 테메르의 편에 서 있었다면 현재 그 수는 200~250 정도로 반감되었다고 말했다.
- 지난 주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브라질 국민의 7%는 테메르 정부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으나 76%는 테메르가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47%는 브라질인인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다고 응답했다.
- 시끄러운 국내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자 기획된 듯 보이는 테메르 대통령의 지난주 러시아와 노르웨이 순방은 오히려 이를 강조하는 역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 테메르는 먼저 ‘소련’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 노르웨이의

에마 솔베르크(Ema Solberg) 총리가 테메르 대통령에게 브라질의 부정부패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말했고 노르웨이에서는 산림파괴 증가를 이유로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한 지원금을 반으로 삭감했다.

- 테메르 정부의 핵심 연정 파트너인 중도우파 브라질 사회민주주의당 의원 일부는 이미 테메르가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월요일, 전 대통령이자 사민당 원로 대변인인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소(Fernando Henrique Cardoso)는 신문 칼럼을 통해 테메르 대통령이 '대승적 제스처'로서 임기가 끝나기 전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원문기사 : President Michel Temer of Brazil Is Charged With Corruption (New York Times, June 26, 2017)

2 한국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보건복지부 노타비스 코리아에 과징금 부과와 제품 보험적용 중지 처분 (LEXOLOGY, 2017.5.8)

- 2017년 4월 27일, 한국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 충격을 줄만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에게 부적절한 금전적 이득을 제공한 혐의로 노바티스 코리아에게 55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노바티스 코리아의 9개 제품에 대한 보험 적용을 중지할 예정이다. 다른 많은 한국 국내 및 다국적 제약회사들 역시 제약회사 관행에 대한 정부의 수사 확대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수사의 추이를 보았을 때 아직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더 많은 회사들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 코리아 건에 대한 공개 성명에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259억원 규모까지 늘어난 의료인에 대한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뇌물) 제공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3자 언론사를 매개로 의료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국내 최대 액수이다. 의료인에 대한 부적절한 금전적 이득 제공 혐의와 관련하여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노바티스를 기소한 형사 사건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 시장: 기회와 위협요인

- 2016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3위의 제약 시장이며 아시아 권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뒤이어 3위 규모의 시장이다. 2015년 151억 달러 규모였던 매출액은 2020년 183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다국적 제약회사 및 기타 생명과학 관련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하였고 한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는 중이다. 노바티스는 2016년 매출액 4500억원을 기록, 국내 최대 매출 다국적 제약회사 중 하나로 부상했다. 2016년 매출액 기준 노바티스의 한국 매출액은 전세계 자사 매출액 중 10위를 기록했다.

- 이처럼 제약산업 규모가 성장한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는 제약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와 뇌물 공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 예를 들어 2010년 11월, 부적절한 이득이나 뇌물 수수 증거가 발견된 경우 혐의가 있는 의료인과 제약회사 양측을 모두 처벌함으로써 약품 가격 상승을 저지하고자 한 쌍벌제가 도입되었다. 쌍벌제의 도입 이전에는 의료진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제약회사만 처벌받았다. 2014년 7월에 한국정부는 노바티스와 같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최대 1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는 ‘리베이트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였다. 삼진아웃제에 의거하여 리베이트 제공이 두 번째 적발되는 경우 리베이트 금액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영구 정지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리베이트 삼진아웃제’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될 시 보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시장에 해당 약품의 대체품목이 없는 경우 상당 금액의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 한국에서 최근 사회에 만연한 뇌물수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 교수, 기자에 대한 특정 접대 및 선물이 금지되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발효되었는데 특별히 제약업계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부적절한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제약업계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80%가 부정부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의사 중 상당수가 국립병원에 고용되어 있거나 의사와 국립대학교수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김영란법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5만원 이상의 선물과 3만원 이상의 접대를 금지하고 있다.
- 규제와 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한국 정부에서는 위반 의심 건에 대하여 국내 및 다국적 제약회사 모두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제약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라 노바티스는 2006년과 2009년 사이에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대하여 23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노바티스 코리아가 제품 발표와 세미나라는 명목으로 의사와 간호사, 병원 직원들에게 무료 여행, 숙박,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7년 4월 27일의 과징금 부과 발표로 노바티스 코리아는 ‘리베이트 삼진아웃제’로 처벌받은 업계 첫 제약회사가 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보험적용이 되는 대체 약품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노바티스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틈을 타’ 경쟁사들이 노바티스의 보험적용 중단 제품 시장 점유율을 자사 제품으로 가져오기 위해 나설 것이다. 노바티스 코리아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하는 최종 절차를 거친 이후 다음 달 안에 사전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바티스 코리아의 2016년 한국 매출은 4500억원 규모로, 매출액 기준 한국 2위의 다국적 제약회사이다. 이처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과징금을 부과로 인하여 노바티스 코리아는 시장점유율 하락과 의료계로부터의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회사의 평판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노바티스의 끝나지 않은 시련: 형사 기소 가능성

- 과징금 납부와는 별도로 노바티스는 형사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2016년 2월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제약전문 언론사를 통하여 의료인들에게 25억 9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노바티스 코리아를 압수수색하였다. 노바티스의 제품에 호의적인 칼럼을 쓰거나 공개 토론회, 회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는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접대나 선물 등이 제공되었다는 특정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2015년 12월 업계의 한 신문사가 관련 조사를 받았었다는 사실이 이후 밝혀졌다. 2016년 3월 25일에는 또 다른 제약업계 신문사가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았다. 2016년 6월 검찰은 노바티스 코리아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를 압수수색하였다. 정부에서는 또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KRPIA 회원사의 해외 학술회의에 참석한 의료인에게 제공된 협찬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기록에는 다국적 제약업계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모두는 한국 내 사업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이들이었다.

- 검찰에서는 노바티스 코리아가 원탁회의 등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언론사들에게 광고비를 제공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 이후 문제의 언론사에서는 사례비나 참가비, 기사 작성/번역비, 자문료 등의 형태로 이 돈을 의료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검찰에서는 언론사는 부차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고 노바티스 코리아에서 참가 의료인과의 접촉, 자료 제공, 사례비 결정 등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때 적발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노바티스 코리아에서 언론사들을 통로로 대신 뇌물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노바티스 직원 6명, 6개 언론사와 그 대표, 의료인 15인을 포함한 34명을 기소했다.
- 노바티스 코리아와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에서 열린 최근 공판에서 전 노바티스 직원이 노바티스가 언론사를 통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이용해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공판에서 검찰은 또한 언론사 두 곳에서 이와 관련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연루된 제약회사에서 자신의 민사 및 형사 처벌 수준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바티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의 비슷한 행태에 대하여 증언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 차례는?

- 검찰의 지난 몇 년 간 추세를 보면 언론사 등을 창구로 해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 있어서 노바티스 사건이 끝이라기보다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검찰청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해숙 의원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행정 조사를 고려할 것이며 조사 개시 이전에 대상 회사와 조사 방법에 대하여 전의원과 협의할 것이다. 전의원은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대한 행정 조사 개시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다.
- 한국 정부의 제약업계 조사 확대에 발맞춰서 한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잠재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시의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한국 내 사업 운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이미 이러한 검토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아직도 남아있는 준법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통제 및 관행 개선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직도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지 않은 제약회사는 이러한 움직임에 뒤쳐져, 언제 자신에게 덮쳐 올지 모르는 검찰조사의 위험성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제약업계의 부정부패 가능성 근절을 목표로 해 왔고 노바티스에 부과된 4,800만 달러의 과징금과 제품 보험적용 중단 조치는 앞으로 다른 제약 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 원문기사: South Korea'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mposes a \$48 Million Fine on Novartis Korea and Suspends Insurance Reimbursement (LEXOLOGY, May 8, 2017)

한국의 공익신고: 한국 재벌문화에 반기를 든 현대맨 (REUTERS, 2017.5.15)

- 한국인 엔지니어 김광호씨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기 위해 지난 해 바다 건너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미국 규제당국 앞에서 26년을 일했던 현대자동차의 안전 부실 의혹에 대해 증언한 것이다.
- 김씨는 현대 품질전략팀이 경영진에게 제출한 내부 보고서를 인용하여 현대차가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 엔진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증언하였다.
- 현대 측에서는 의혹을 부인했다. 현대는 이메일을 통하여 로이터에게 모든 안전관련 운영에 개방성과 투명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리콜 결정은 국제 규제 및 엄격한 내부 절차 모두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로이터는 현대에서 신청한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김씨가 인용한 내부 보고서는 살펴볼 수 없었다.
- 의혹이 제기된 결함과 9개의 기타 결함에 대한 250쪽 분량의 내부 보고서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전달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중요시하는 한국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 가족경영 재벌기업의 각종 스캔들로 몸살을 앓는 한국에서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관련단체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의 상당수가 결국 해고되거나 소외당한다.
- 김씨는 지난 11월 회사 기술 및 영업에 대한 비밀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한 한국정부기관의 결정 이후 복직되었다.
- 현대는 이러한 결정을 철회하기 위하여 당국에 소를 제기했다.
- 김씨는 딸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 자동차업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공익신고자가 될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대통령이 연루된 뇌물 스캔들로 인한 박전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주요 과제의 최우선이 재벌개혁이다.

회사에 충성한 샐러리맨

- 지난 금요일, 김광호씨가 밝힌 결함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에서는 드문 의무 리콜 명령을 발표한 이후 현대기아차는 추가로 240,000대를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 55세의 김씨는 처음부터 공익신고를 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 회사에 충성하는 샐러리맨이었던 김씨는 정밀기계를 전공하고 1991년 현대에 입사한 후 엔진 테스트와 플래닝 분야에서 일했다.
- 2015년 김씨는 리콜 관련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품질전략팀으로 옮겼다.
- 같은 해 현대는 엔진 정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소나타 50만대의 리콜을 발표하였다.
- 김씨는 품질전략팀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현대 측이 더 많은 차종과 관련하여 한국 시장에서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단순히 제조 과정이 아니라 엔진 설계에 있었으며 현대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모든 관련된 차종의 엔진을 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김씨는 덧붙였다.
- 현대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여 김씨의 문제 제기 이전 이후 모두 관련 문제를 긴밀히 모니터링했다고 말했다.
- 현대 측에서는 또한 ‘현대는 지금까지 시행해 온 모든 리콜을 포함하여 안전과 품질, 각 시장의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가족의 지지

-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대한 제보 이후 김광호씨는 한국 언론과 정부에 같은 내용을 알렸다.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김광호씨의 제보로 인하여 국내 현대차 리콜 관련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 지난 달 현대기아차는 3,600억원의 비용으로 엔진 정지 위험이 있는 차량 150만대를 미국과 캐나다, 한국에서 리콜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도로교통 안전국은 김광호씨의 제보로 인하여 미국 내 리콜이 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김광호씨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중이며 ‘보증서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에 대한 처벌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김광호씨는 공익신고에 따르는 개인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경찰 수사관들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문서와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 경찰은 김광호씨에 대한 현대차의 고소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김광호씨는 복직되기 전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해 저축과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 ‘처음에는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해고되면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완강하게 지금 고백하지 않으면 문제는 영원히 묻혀버릴 거라고 설득 했습니다’라고 김광호씨는 덧붙였다.

※ 원문기사: Blowing the whistle in South Korea: Hyundai Man takes on chaebol culture (REUTERS, MAY 15, 2017)

3 국제회의 동향

① '17년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1.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7. 4. 25.(화) ~ 4. 3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 참석자 : IOI 지역이사 20명 참석
 - ※ 우리측: 위원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에디터

2. 주요 성과

□ IOI 아시아 지역이사로서 위원회 위상·역할 부각

- IOI 정책 논의 및 주요 의사결정 주도적 참여
 - IOI 아시아 지역 이사기관으로서 옴부즈만 발전을 위한 주요 안전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참여
 - ※ 신규가입 회원 자격 심사, IOI 규정개정 소위원회 참여, 재정집행 승인 등
- '2017 평창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컨퍼런스' 홍보
 - 국제 옴부즈만 활동을 주도하는 IOI 이사들을 대상으로 AOA 행사를 홍보함으로써 행사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참여 제고

□ 태국 옴부즈만과 상대국민 권익보호 협력 체계 공고화

- 양 기관의 상대국 재외국민 권익 보호 노력 및 성과 공유
 - (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고충민원 도우미 제도 및 주한 태국 대사관과의 정례협의체 발족 등 주요 시책과 성과 소개
 - (태국) 태국옴부즈만의 한국인 민원 해결 사례 중 롯데면세점의 태국 국제 공항 인도장 설치 과정의 애로사항 해결 사례 소개
 - 태국 옴부즈만의 도움으로 현지기업 독점구조였던 태국 공항내 인도장 설치를 롯데를 포함한 해외기업도 가능토록 개선

□ IACA 학장 간담회를 통한 국제 반부패 네트워크 강화

- 양 기관 협력방안 논의 및 청탁금지법 제정 등 최근 한국 정부의 반부패 이니셔티브 소개
- 부패척결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민간부문 청렴 교육에 관심이 큰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 파악

② '17년 제2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1.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7. 4. 11.(화) ~ 4. 12.(수), 브라질 브라질리아
 - 주관기관 :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독일, 브라질)
 - 참석자 : G20 회원국 및 초청국(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대표, OECD, UNODC, World Bank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
- ※ 우리 측 대표로는 부패방지국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법무부 검사, 외교부 사무관 참석

2. 참석 결과

□ 회의 결과

- 실무그룹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최종안 완성하여 7월 정상회의에 성과물로 제출(공동의장국인 독일 등 주도)
 - 부패 관련 법인의 책임 원칙, 반부패 조직화 원칙, 부패를 초래하는 야생동식물 불법 거래 근절 원칙, 관세부문 청렴성 증진 원칙 등
- 반부패 기술지원 등 우수사례와 반부패 추진현황 공유(브라질 주도)
- G20 회원국별 반부패 기능 강화 현황 공유
 - (중국) 감찰부에 다른 부처의 반부패 기능을 통합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National Commission for Supervision으로 개편. 조사감사 형사적 기능 추가
 - (네덜란드) OECD 협약 관련 외국 뇌물에 대한 반부패센터 설립
 - (프랑스) 법무부 소속의 Anti-Corruption Agency 설립(판사 6명, 직원 70명)
 - (일본) UN반부패협약 비준('15.4월, 177개국)을 위한 국내법 국회 제출
- G20 반부패실무그룹 향후 안전 선정방향 논의
 - 회원국들의 경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반부패 기술지원 강화
 - ICT, 플랫폼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부패방지 방안
 -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과정의 로비 차단을 위한 더 나은 규제, 스포츠 분야 부패방지 등

□ 위원회 활동

- 우리 위원회의 최근 반부패 기술지원 경험 소개
 - 베트남 반부패 시책평가, 튀니지 반부패담당자 워크숍, 외국 공무원에 대한 반부패교육 사례
 - 시책평가 모형에 대한 상세자료를 영문책자로 배포
- G20 2017-18 반부패행동계획 관련 소관과제 추진계획 보고
 - G20 국가별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 계획
 - 국가별 정책조사 사업에 대한 회원국들의 자료제출 등 협조 당부

□ 관찰 및 평가

- G20 반부패실무그룹 논의 주제가 야생동물 포획 관련 부패 근절, 스포츠분야 부패방지 등으로 심화되는 경향
 - G20 논의결과는 국가별로 강제력은 없으나, 국가별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이행현황 제출 등을 통해 다양한 반부패 정책들이 국제사회로 확산 유도
- G20 실무그룹의 향후 논의주제와 관련된 우리 위원회의 경험 사례를 지속 홍보하여 적극 대응
 - ※ ICT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부패방지정책,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 부패영향평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입법현황 등
- G20국가별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는 우리나라의 부패 방지 시책평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

③ 제15차 AOA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 회의 개요

- 기간 : '17.5.16.(화) ~ 5.19.(금), 4일간
- 장소 :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주최·주관 : 국민권익위원회·강원도 (공동)
- 참가인원 : AOA 회원국 대표단 등 국내·외 참가자 463여명
 - 국외참가자 : 회원국 대표단, 초청연사, 주한 외국대사 등 25개국 56명
 - 국내참가자 : 국회, 시·도 옴부즈만, 학계, 유관기관 등 406명

□ 회의 결과

- AOA 총회
 - AOA 규정상 가입 조건 4가지 규정을 완화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총회에서 용인하면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상 가입 요건 완화
 - 요르단, 조지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러시아 연방), 터키 옴부즈만의 정회원 가입 신청을 이견 없이 승인
 - 퇴직 AOA 회원 기관장들을 위한 AOA Alumni를 설립. 퇴직 기관장은 자동으로 Alumni 회원이 되며, AOA 주요 행사에 초청됨
- IOI 아시아지역총회
 - 아시아 지역회장의 소속기관이 IOI 아시아 지역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명시화 하는 조항 신설
 - IOI 활동에 대한 아시아지역의 적극적 참여, 아시아 지역이사회의 최소 2회 개최, 아시아 지역 회원 확대 안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승인
- 컨퍼런스에는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과 관련 전문가 등 약 400명이 참석하여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우리나라에서는 위원회 성영훈위원장과 강원도 갈등조정위원회 신철영 위원장이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성영훈 위원장)과 '복잡 다양한 민원 해결을 위한 기관간 협업 강화 및 기반 구축 사례'(신철영 위원장)를 주제로 발표

4 제8차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장 회의(ACA) 포럼

□ 회의 개요

- (일 시) 2017.5.24.(수)~5.25(목)
- (장 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주 관)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의장국), 국민권익위원회(사무국)
- (참석자)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브루나이 부패방지국(ACB), 대만 염정서(AAC), 초청연사 등
 - ※ 우리 측 대표로는 상임위원, 국제교류담당관, 청탁금지제도과 서기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에디터 참석

□ 참석 결과

○ 기관별 활동 보고

- (인도네시아) 대국민 반부패 인식제고를 위한 TV 및 어플리케이션 활용, 공직자 재산신고제도(e-LHKPN) 도입, 광물·산림·해양·자원 분야의 부패척결을 위한 허가 체제(GNPSDA) 시행하고 있음
- (권익위)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성과와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민간영역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위원회 주요 정책을 소개
- (말레이시아) 민간영역에의 반부패 교육과 기업윤리 제고를 위한 반부패 윤리센터를 개관했으며, 초중등 교과서에 반부패 관련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싱가포르)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 헤리티지 센터(CRHC)를 '17년 1월에 개관하였으며, 뇌물방지 관리 체계에 대한 ISO 37001을 올해부터 시행중임
- (브루나이) 브루나이 부패방지국은 부패 조사와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장관실의 검사차장이 부패 관련 기소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
- (대만) 식품 안전 및 청렴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행 중이며, 최근 투

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윤리 강령을 개정하였고,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하려고 추진 중임

○ 기관별 발표

- (말레이시아) 청렴담당관 설치·운영을 통한 공공부문 청렴 시스템 구축
- (인도네시아) 천연 자원분야 반부패 활동과 인도네시아 사례
-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과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부패 방지
-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부패 방지 경험

□ 주요 성과

- 참석자들은 부패 척결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정책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함을 공감
 - 각 국가별 우수사례 공유 및 활발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전개
 - 향후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사업 등을 위한 발판 마련에 의의
- 아태지역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강한 부패 척결 의지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재확인
- ‘청탁금지법’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을 포함한 UNDP 등의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에 기여

5 제8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6. 6. 20.(월) ~ 6. 25.(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141개국 및 서명국(일본) 대표, 유엔마약 범죄사무소(UNODC), 유럽회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500명
- ※ 우리측: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주무관, 외교부 서기관

□ 주요 결과

- 신규 비준국인 벨리즈의 점검국으로 아이티와 투발루가 선정되었으며, 2주기 2차년도('17.6월~'18.6월) 이행점검 수검국 49개국에 대한 점검국 추첨이 실시되었고 우리나라는 점검국으로 선정되지 않음
- 2주기 1차년도 수검국 29개 중 20개국이 2주기 점검대상인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과 관련하여 자체평가 체크리스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으며, 14개국이 대면회의를 개최하였고 2개국의 요약보고서가 제출되었음
 -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함께 2주기 1차년도 수검국 중 솔로몬제도 대상 이행 점검에 참여하고 있음
- 사무국은 비정규 예산의 재원인 자발적 기여금 부족으로 2주기 이행 점검체계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함
- 비정부기구 브리핑 세션에서 국제투명성기구(TI) 대표가 최근 러시아의 자금세탁 스캔들을 언급한 데 대해 러시아 대표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향후 시민참여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주장함

4 옴부즈만 소식

□ 아일랜드: 옴부즈만 및 어린이 옴부즈만에서 난민거주시설 주민 민원 조사 담당

※ 출처: IRELAND 'Ombudsman and Ombudsman for Children can now investigate complaints from those in Direct Provision' (IOI 홈페이지>News, 04.04.2017)

- 4월 3일 월요일부터 옴부즈만이 난민거주시설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기로 했다. 아동 관련 민원이나 아동을 대표하여 제기하는 민원은 아동옴부즈만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는 양 옴부즈만에서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변화로, 동등한 민원접수 절차를 난민거주시설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지금까지 난민거주시설 주민은 아일랜드 법무부 산하기관인 난민 수용통합기구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었다. 거주시설 관리인이나 법무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난민시설 주민들은 이제 옴부즈만이나 아동옴부즈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 피터 틴달(Peter Tyndall) 옴부즈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아일랜드의 난민거주시설 제도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에서 조만간 더 간소화된 난민신청제도를 시행할 것이고 난민거주시설 주민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위한 독립 민원접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옴부즈만 직원들은 이미 전국 난민시설 주민들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들은 새로운 제도를 굉장히 환영하였다.”
- 아동 관련 민원과 18세 미만 난민의 민원을 조사하게 될 아동 옴부즈만실의 니알 멀둔(Niall Muldoon)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난민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역시 이제는 아동 옴부즈만실을 통하여 동등한 민원제기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아동 옴부즈만실에서 난민거주시설 거주 아동의

전반적인 복지 향상에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난민거주시설의 청소년들은 이제 민원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 양 옴부즈만은 프란시스 피츠제럴드(Frances Fitzgerald) 부총리 겸 법무장관과 산하 공무원의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 옴부즈만실과 아동옴부즈만실은 민원인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난민거주시설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 거주시설 수준 ▶ 식사 ▶ 청소 ▶ 시설
- 난민주거시설 주민은 아일랜드의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학교, 병원, 사회복지 서비스, 지방정부, 중앙정부 부처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양 옴부즈만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결정을 위한 심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 ▶ 난민 지위 ▶ 시민권 ▶ 영주권 ▶ 비자
- 옴부즈만실에서는 난민거주시설 주민을 위한 민원제기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표를 발간했다. 2017년 3월 중 옴부즈만실 직원들은 전국 난민거주시설 주민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옴부즈만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옴부즈만실은 또한 민원제기절차 예시 작성에 대한 자문 등을 포함하는 자료집을 발행하여 난민거주시설 관리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양 옴부즈만실의 합동 브리핑에는 33개의 난민거주시설 관리자, 난민수용통합기구, 법무부 직원들이 참여하였다.

□ **홍콩: 학생 정신건강평가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 조사**

※ 출처: HONG KONG ‘Ombudsman probes Government’s follow-up mechanism regarding psychological health assessment of school children’ (IOI 홈페이지>News, 04.04.2017)

- 코니 라우(Connie Lau) 홍콩 옴부즈만은 학생 정신건강 평가에 대한 보건부와 교육청의 후속조치가 충분히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1995년 홍콩 보건부는 학생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의 신체·정신적 건강 보호였다. 지난 수년간 홍콩 학생의 90%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각 학년 학생들의 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건강검진(정신건강평가)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 정신건강평가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의 결과는 보건부의 특수평가센터 혹은 여타 전문 클리닉/단체로 이관되어야 한다. 교육청의 역할은 보건부가 일선 학교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보건부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의 배부와 회수를 보조한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에도 적절한 후속조치나 관련 부처로의 이관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평가 결과나 후속조치에 대하여 알 수 없는 등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옴부즈만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또한 건강 검진에 참여한 학생의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보건부는 학생이 스스로 검사 결과를 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일단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관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옴부즈만은 프로그램의 시행과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후속관찰 조치 책임을 두 개의 부처에서 나누어 맡아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저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 라우 옴부즈만은 ‘학생의 발달과 성장에 있어서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건부와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초기에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 학생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평가 관련하여 보건부와 교육청의 후속조치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지원을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학생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학생들에 대한 복지부의 후속조치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 ▶ 학교와 학부모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정보 배포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교육청과 보건부 사이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 ▶ 개선 및 강화할 부분은 없는지

□ 나미비아: 옴부즈만이 이룬 인권의 승리

※ 출처: NAMIBIA ‘Ombudsman secures Human Rights victory’ (IOI 홈페이지>News, 12.04.2017)

- 세계옴부즈만협회 존 월터스(John Walters) 회장이 나미비아 빈트 후크 경찰 유치장에서 46명의 불법체류 추정 외국인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앙골라,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등에서 온 불법체류 추정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는 옴부즈만 조사 결과에 이어 빈트후크 고등법원에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다. 옴부즈만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관련 조사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옴부즈만에서는 이들 불법체류 추정 외국인들이 정식으로 발부된 체포영장 없이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옴부즈만은 이들의 구금에 있어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준수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의거하여 사건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나미비아 출입국관리법 조항에서 출입국관리관은 나미비아의 불법체류 추정 외국인을 체포할 수 있고 나미비아 국내 불법체류 조사 기간 중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외국인 최장 14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또한 불법체류 추정 외국인의 구금 기간이 내무부 장관 승인 하에 한 번에 최대 14일까지만 연장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으로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 중에는 17세의 미성년자 두 명이 포함되어 있다.
- 나미비아 정부는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외국인들의 구금이 불법적이었으며 이들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정부의 인정 이후 우이테텔 판사는 구금된 외국인들의 석방과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처분을 위해 법원명령을 발부하였다.

□ 시에라리온: 신임 옴부즈만 취임

※ 출처: SIERRA LEONE 'New Ombudsman takes oath of office' (IOI 홈페이지>News, 09.05.2017)

-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변호사 출신 신임 시에라리온 옴부즈만 멀론 니콜-윌슨(Merlon Nico-Wilson)의 취임식이 프리타운에 위치한 의회에서 열렸다. 옴부즈만 취임 전 니콜-윌슨은 말라이카 챔버스의 파트너로서 젊고 성공한 변호사였으며 부인 마쿠타 니콜-윌슨(Makuta Nicol-Wilson)과의 사이에 세 아이들을 두고 있다.



- 취임식에서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Ernest Bai Koroma) 대통령은 니콜-윌슨 신임 옴부즈만이 역대 옴부즈만 중 최연소라고 언급하며 니콜-윌슨 옴부즈만의 학문적 자질과 전문적 경력을 고려했을 때 옴부즈만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시에라리온 국민의 기대 부응에 최선의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코로마 대통령은 또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신임 옴부즈만이 최고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기반하여 빠르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취임식에서 니콜-윌슨 신임 옴부즈만은 코로마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시에라리온 헌법의 지지, 유지,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옴부즈만은 '시에라리온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모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니콜-윌슨 신임 옴부즈만은 국제법과 인권 관련 두 개의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에라리온 법률상담센터를 공동 창립하고 운영한 저명한 변호사 출신이다. 유엔이 지원한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최연소 피고측 변호인이자 사건 담당자로 일하기도 했다.
- 니콜-윌슨 신임 옴부즈만은 또한 시에라리온 대학교 포라베이 칼리지의 평화·분쟁학과에서 국제인도주의법 및 국제인권법을 강의하기도 했다. 시에라리온 반부패위원회의 법률고문직도 역임했으며 법률구조위원회의 전신인 임시국가법률구조제도의 초대 조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 스웨덴 : 보호자 미동반 아동 인계 및 후속조치의 허점

※ 출처: SWEDEN 'Failures in the placement and follow up of unaccompanied minors' (ICJ 홈페이지 News, 16.05.2017)

-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의 인계와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국의 후속조치에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가을 상당수의 보호자 미동반 아동이 스웨덴으로 들어왔다. 의회 옴부즈만 스테판 홀게르손(Stefan Holgersson)은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일련의 조사와 감사를 시행하였다.
- 의회 옴부즈만 스테판 홀게르손은 '미성년자들의 스웨덴 도착 시점에는 사회복지국의 담당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급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 이후 충분한 평가를 통하여 아이들이 지낼 곳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 보호자 없이 스웨덴으로 보내지는 미성년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스웨덴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긴급 해결책을 마련해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는 불가능하다. 일단은 당장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 때문에 사회복지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하는 아동의 돌봄이나 적합한 환경 등에 대한 평가 없이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곳을 알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아동은 전혀 적합한 환경이 아닌 곳으로 보내졌고, 아동에게 주거를 제공하도록 정부 측과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이 해당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 의회 옴부즈만은 또한 '최근 스웨덴 의회에서는 보호자 미동반 아동 컨설턴트 활동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최근 조사에서 밝혀진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보장국의 중요한 역할은 아동 보호와 관련된 후속조치이다.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주거 환경을

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의회 옴부즈만 조사 결과 이들 아동의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 의회 옴부즈만 스테판 홀게르손은 ‘아동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되기까지 걸리는 긴 시간을 생각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 보호자 없이 스웨덴에 들어온 아동들을 도착한 장소의 지방자치단체 내로 인계한 경우와 기타 지방자치단체로 인계한 경우 후속 조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착한 곳의 지방자치단체 내에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홀게르손 옴부즈만은 ‘2015년 가을 벌어졌던 대혼란 사태의 중요한 교훈은 아동들을 도착지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보호하거나 혹은 충분한 후속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내에 보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캐나다: 시 당국에서 공원 사용 허가 부당 취소

※ 출처: CANADA 'City Acted Unfairly in Cancelling Park Permit' (IOI 홈페이지>News, 22.05.2017)

- 캐나다 토론토시 옴부즈만은 토론토 공원·산림·레크리에이션 담당부서 (Parks, Forestry and Recreation division, PF&R)에서 시 동쪽 끝에 위치한 공원의 사용 허가를 정당한 절차 없이 너무 빨리 취소했다고 밝혔다.
- 2017년 5월 19일, 수잔 오플러(Susan Opler) 토론토 옴부즈만은 사설 어린이 스포츠 프로그램의 마을 공원 사용과 관련하여 PF&R의 마을 주민 민원 대응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 오플러 옴부즈만은 '토론토에는 마을의 보물이라고 할만한 1,500개 이상의 공원이 있다. 이들 공원을 통해 가족과 단체, 개인들이 녹지 공간과 여가 기회를 제공받는다. 시 당국에서는 공원 사용 허가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이 절차는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토 옴부즈만에서는 PF&R의 공원 신규 사용 신청 허가, 민원 처리, 이용 허가 취소 혹은 변경을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살펴보았다.
- 오플러는 '시에서는 매년 수천 건 이상의 공원 사용 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었지만, 앞서 언급한 민원 제기 건을 통하여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 당국의 모든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과 절차의 행정적 정당성과 적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문제의 사설 스포츠 강좌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 관련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 PF&R에서는 공원 사용 시간과 형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없이 허가를 내주었다. 주민이 민원제기를 하면 PF&R은 관련 조사나 검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공원 사용을 권유하기 전 사용신청을 한 회사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PF&R의 민원정책에 공원 사용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기존 정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거나 적용 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 공원 사용허가 위반의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 오픈러 옴부즈만은 ‘애초에 공원 사용 허가 신청 절차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공원 사용 허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시 당국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했지만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 토론토 옴부즈만은 PF&R의 공원 사용허가와 관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덟 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 ▶ 새로운 형태의 공원 사용 신청 검토에 대한 분명한 절차 확립
 - ▶ 공원 사용 허가 취소 혹은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적용할 수 있는 규칙 도입
 - ▶ 공원 사용 허가 취소 혹은 변경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반론 기회를 주고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
 - ▶ 기록 관리 필요성 등 업무에 적용되는 모든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 PF&R는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시행하는 데 동의했다. 토론토 옴부즈만은 시행 경과를 관찰할 예정이다.

□ 호주: 연방 옴부즈만 임명

※ 출처: AUSTRALIA ‘Appointment of the Commonwealth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29.05.2017)

- 호주 정부가 마이클 맨토르프(Michael Manthorpe)를 연방 옴부즈만으로 임명했다.
- 호주 총리실의 제임스 맥그래스(James McGrath) 차관보는 맨토르프 신임 옴부즈만이 수년 간 공공 부문 전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방 옴부즈만 직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던 경력을 통하여 연방 옴부즈만실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맨토르프는 출입국관리 및 국경보호부 차관으로서 대규모 서비스 제공과 호주 정부를 위한 복잡한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비자·시민권 서비스 그룹을 이끌었다. 맨토르프는 또한 2013년부터 출입국관리 및 국경보호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했으며 그 이후에는 교육, 고용, 사업장 관계 부처의 고위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호주에서 가장 큰 유아보육 회사인 ABC 러닝의 파산 사태를 잘 관리한 공로로 우수 공무원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다.
- 맨토르프 옴부즈만의 5년 임기는 2017년 5월 8일에 시작되며, 콜린 니브(Colin Neave) 전 연방 옴부즈만의 2017년 1월 사임 이후 공석이었던 옴부즈만의 빈자리를 메우게 된다.
- 맨토르프 신임 옴부즈만은 연방 옴부즈만의 공석 기간 동안 옴부즈만 직을 수행했던 리차드 글렌(Richard Glenn)과 도리스 깁(Doris Gibb) 대행 및 연방 옴부즈만실 임직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호주: 퀸즐랜드 옴부즈만, 토지 경매공고에 소유주 이름 명시 비판

※ 출처: AUSTRALIA ‘Queensland Ombudsman criticizes naming of property owner in auction notice’ (IOI 홈페이지>News, 02.06.2017)

배경

- 투움바 주 의회는 지방정부규칙 2012에 따라 세금을 체납한 토지 소유주의 토지를 경매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 연체된 세금과 공공요금으로 인하여 주정부에서 개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한 부동산 소유주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자신의 이름 전체가 적혀 있는 경매 공고를 집 밖에서 발견했다.
- 이 부동산 소유주는 경매 사유와 자신의 이름을 경매 공고에 명시한 주 의회의 행위에 대하여 주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 관련 조사에서는 부동산 바로 바깥에 경매 공고를 하면서 현 소유주의 이름 전체를 명시하는 제도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검토했다.
- 체납 세금과 공공요금 회수를 위하여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당국에서 처분하는 법률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조사가 시행되는 동안 옴부즈만과 주 의회 사이에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사 도중 인프라·지방정부·기획부에서 자문을 제공했다.
- 조사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주요 문제가 있었다.
 1. 주 정부에서 경매 공고에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가
 - ▶ 조사 결과 경매공고에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을 반드시 포함할 명백한 법적 요건은 없고 관련 규정 제 s.142(4)(b)항의 ‘토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는 항목이 소유주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적합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 따라서 주 의회에서 경매 공고에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 의회가 소유주의 이름을 경매공고에 명시한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가

- ▶ 조사 결과 특정 토지의 소유주 이름은 공공 기록에 해당하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3. 주 의회에서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을 경매공고에 포함하는 행위가 합리적인가
 - ▶ 조사 결과 경매공고에 토지 소유주 이름을 명시하기로 한 결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가해질 수 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의 가능성이 토지 매입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소유주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기 때문이다.

결과

- 조사 결과 또한 경매공고에 토지 소유주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한 주 의회의 결정이 관련규정 s.142항에 따른 법적 요건이 아니며 토지 매도 절차 상 불필요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행정행위임이 밝혀졌다.
- 주 의회에서 토지 소유주의 이름을 경매공고에 공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체납된 세금과 공공요금 회수를 위하여 토지 경매를 할 때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다시 검토하며 토지 소유주의 이름이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권고안이 제시되었고 주 의회에서는 이를 수용했다.

중요점

-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주의 이름을 토지 경매에 포함하는 주 의회의 행위가 법적으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에게 상당 수준의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고, 따라서 이는 불합리한 것이다.
- 개인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나 당혹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 의회는 개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의 합리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